

# 해 외 출 장 복 명 서

출 장 자	평등인력정책연구실 여성인재정책센터	직 위	선임 연구위원	성 명	이수연
출장기간	'11.7.15. ~ '11.7.21	출장지	유엔본부(뉴욕)		
출장목적	○ 한국의 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보고서 대면심의 수임 지원				
회의 주요 내용	○ 한국 제7차 보고서 심의 ○ 관련 NGO 회의				

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

2011. 7. .

출 장 복 명 자 : 이수연 선임연구위원

#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

유엔 출장복명서

2010. 7.

보고자 : 이수연

(평등인력정책연구실, 평등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)

□ 출장일정

일 자	지 역	시 간	주 요 일 정	주요 면담자	비 고
7.15(금)	인천 뉴욕	11:00 11:55	○ 인천 출발 ○ 뉴욕 도착		
7.15(금)	뉴욕	15:00~ 18:00	○ 이디오피아 심의 참 관	-Soledad Murillo de la Vega(CEDAW 위 원장) 및 CEDAW 위원들 -손애리 여성가족부 과장/최혜민 사무관	한국 심의받 기 위한 준비
7.16(토)	뉴욕	10:00~ 12:00	○ 심의를 위한 준비회의	-최혜민 여성가족부 사무관	
7.17(일)	뉴욕	14:00~ 16:00	○ 심의를 위한 준비회의	-최혜민 여성가족부 사무관	
7.18(월)	뉴욕	08:00~ 12:00 15:00~ 16:00 16:00~ 17:00	○ 심의 여행연습 ○ NGO 회의 ○ 인권위원회 회의	-손애리, 강선혜 여 성가족부 과장 및 사무관 -각 부처 대표단	
7.19(화)	뉴욕	10:00~1 7:00	○ 한국 심의	-CEDAW 위원들 -한국 대표단(여성 가족부 장관 외 14 명)	
7.20(수)	뉴욕	14:00	○ 뉴욕 출발		
7.21(목)	인천	17:20	○ 인천 도착		

□ 주요 내용

## 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

### 1. CEDAW와 한국

#### 1) CEDAW(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)

□ 개념과 역사적 과정

-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1979년에 제정하여 1981년 발표함
-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
- 현재 186개국 비준
- 비준국에서 CEDAW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
- 9대 주요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임(한국은 9개 중 7개 비준: 이주노동자, 강  
제실종 제외)

□ 원칙 및 내용

- 평등, 비차별
-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
- 국가기관, 개인, 기업, 단체 등 모든 주체에 의한 차별 금지
- 성평등을 국가 의무로 규정
- 1조: 차별의 개념
- 2-5조: 법적 평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 보장(2조)  
성역할 고정관념 등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전통의  
변화까지 포함(3조)  
실질적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라  
고 규정(4조)  
모성보호의 특별조치 필요성, 모성의 사회적 기능, 자녀양육에  
남녀공동책임 규정(5조)
- 6~12조: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(6조)  
정치/공직에서의 여성차별(7조)  
국제적 대표성에서의 차별(8조)

- 국적에서의 차별(9조)
- 교육에서의 차별(10조)
- 고용에서의 차별(11조)
- 보건분야에서의 차별(12조)

-13~16조

- 가족수당,은행대출,여가 등 경제적, 사회적 생활에서의 차별(13조)
-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(14조)
- 법적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차별(15조)
-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의 차별(16조)

## 2) 한국의 협력 과정

### □ 한국의 협약 비준 및 이행

- 1984년 비준, 1985년 발효 (16조 g항 가족성에 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 조항은 유보하고 있음)
- 현재 7차 보고서까지 제출, 2007년 7.31. 5,6차 보고서 심의 받음

## 2. 한국의 7차 보고서 심의

### 1) 7차 보고서 제출

2006년~2009년의 협약 실행 과정을 담아 2010년에 제출하였음

### 2) 7차 보고서 심의

- 심의절차: 국가보고서 제출(한국) → 심의 일정 확정 → pre-session working group 질문서를 해당국에 송부 → 국가 서면 답변서 제출(한국) → 대면 심의(1일)
- 심의과정: 정부대표단 대표 연설 → 협약 조항에 따라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위원들 질문 → 부분별 답변 (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후에 서면으로 제출)
- 최종견해(concluding observations) 채택: 비공개 회의에서 사안 정리 → 국가 담당의원(country rapporteur) 초안 작성 후 위원들 회람 → 전체회의에서 문항별 심의 후 확정
- ※국가보고서 제출 후 시민단체에서 자신들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한 shadow report를 제출하고 심의 이전에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로비함

## 3) 7차 보고서 심의의 주요 안건

- 자녀의 성 선택
  - CEDAW 16조 G조항(자녀의 성결정 선택의 자유) 아직 유보 철회하지 않았는데 철회를 위한 계획을 알려주기 바람
  - 결혼시 여성이 자신의 성을 유지하는지 알려주기 바람
-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
  - 현 정부 들어 정부와 NGO 사이의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 또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NGO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NGO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?
  - 한국의 NGO의 수준이 인상적임, 많은 NGO가 있는데 그 중에 주변 단체와도 협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? 협력 대상 NGO를 선정하는 기준은?
- 차별금지법
  - 정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국회에서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?
  -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? 성정체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지?
- 여성의 결정권(낙태)
  - CEDAW의 여성의 낙태 결정권 채택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?
- 여성부/성평등, 성주류화 정책
  - 한국에서는 성평등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체제가 잘 되어있는데 반해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와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?
  - 여성부가 변화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여성부의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여성정책의 강화라고 볼 수 있는지? 성평등보다 가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?
  - 성평등 관련하여 국가조직은 수평적으로는 15개의 다른 부처가 있고 수직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식, 비공식적 채널이 있는지?
  - 성주류화 정책 관련 높은 차원에서 조정 메커니즘이 있는지? 시민사회와의 협력 채널이 있는지?
  - 성인지예산의 비율은 얼마인지?

- ODA
  - ODA 수행 관련해서 CEDAW의 권고를 수용했는지?
  - ODA를 성인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함
- 여성 정치 대표성
  - 선출직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? 여성 후보자를 50% 할당하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선자의 비율은 왜 낮은지?
- 이주여성
  - 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정책을 쓰고 있는지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측면도 있는지?
  -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?
  - 이주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는지? 성폭력을 신고했을 때 어떤 보호조치가 있는지?
  - 결혼이주여성이 비자갱신, 국적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문제임
- 인신매매
  - 인신매매 관련 국제 협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?
  -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있는지?
  - 인신매매에 대한 종합법이 없고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통계가 없음
- 성매매
  -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지?
  - 성매매 포주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?
- 여성에 대한 폭력
  -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? 재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는?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협력체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효율적인지?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도시 크기별 통계가 존재하는지?
  - 학교에서의 폭력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?  
학교 교재에 인권적 시각을 포함시키고 있는지?
  - 부부간격을 처벌하는 법이 없는 것이 문제임
  - 현재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필요한데 철회할

계획은? 여성이 소송을 철회할 경우에도 처벌가능한지?

- 가사노동자
  - 올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ILO 협약을 승인하였는지?
- 비정규직 여성
  -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조치는?
- CEDAW 협약 준수
  - 국회의 협약 준수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지? 모든 국내법이 CEDAW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? 국회의 여성관련 위원회 등이 국회 내에서의 CEDAW 준수를 홍보하고 있는지?

#### 4) 여성단체 SHADOW REPORT 안건

- 젠더 거버넌스의 와해, 시민사회 배제
- 친고죄 조항, 부부간격, 비정규직/가사 노동자, 가정폭력, 성매매
- 통일/안보 과정에서 여성 제외
- 성형 관련 인권 문제
- 이주여성 국적 취득시 남편 승인 문제
- 인신매매 법률의 필요성
- 여성 휴직 활성화, 공공보육
- 공직자 성매매 처벌
- 여성 아동 성폭력, 청소년 성매매
- 공직자의 성주류화, 공기업 여성 대표성
- 여성 성소수자 문제
- 장애 여성의 모성권

